

갑질금지법 100일 직장인 40% “줄었다”

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공공·대기업 줄어...영세사업장은 여전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2일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설문조사) 응답이 39.2%로 나타났다”며 갑질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9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갑질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것은 법 시행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갑질지수는 30.5로 지난해 갑질지수 35.0에 비해 4.5점이 감소했다”며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 회식강요, 폭언, 반성강요, 성희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8~15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0에 가까울수록 갑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갑질 중에서도 상사의 모욕행위와 불합리한 회식문화가 지난해에 비해 가장 크게 줄었다. 다른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는 항목은 지난해에 비해 12.1점이 낮은 29.9점이었고,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를 강요한다는 설문은 9.8점이 줄어든 23.6점이었다.

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한다거나(33.8점→23.6점) 부당한 경위사와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경우(30.6점→20.9점)도 줄어들었다. 성희롱과 성추행(26.3→17.9)도 감소했다.

그러나 줄지 않은 갑질도 있었다.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휴게공간이 없고 자신을 둘러싼 뒷담화가 만연하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갑질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지난 6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갑질금지법이 시작된 7월 16일에 1달 앞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법시행(예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2%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갑질금지법은 대기업과 공공기

관에서 좀 더 많이 교육됐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직원과 비정규직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기업 갑

질지수는 37.5에서 30.6으로, 공공부문 갑질지수는 35.6에서 26.0으로 줄었다. 그러나 민간중소영세기업은 28.4에서 오히려 31.4로 갑질이 많아졌다.

직장갑질 예방교육은 공공기관(59.7%), 국내 대기업(46.4%), 국내 중견기업(32.3%), 국내 중소기업(22.2%), 영세 개인사업자(10.1%)순으로 이뤄졌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갑질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갑질지수가 많이 감소했다”며 “이는 갑질금지법 시행 후 사내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민간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갑질 지수가 올랐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코스모스와 함께 가을 만끽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던 22일 대전 유성구 갑천 둔치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노란 코스모스를 구경하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정시 확대’ 언급 文대통령...주요대수능 비중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 시험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즉각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여의도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여당이 줄곧 정시 확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대입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며 “(현행 고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더 이상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 핵심 교육정책으로 오는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대표적인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듣는 제도다. 수능의 힘이 세지면 학생들은 수능과목에 종속돼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듣기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는 수능 축소 시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납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이며, 추가된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이다.

추가된 어종은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등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의 유효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계산관 등 준비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간을 감안해 결정됐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 판결

17년전 다방종업원 살해혐의 40대 ‘무기징역’서 ‘무죄’ 확정

17년 전 부산의 한 다방 여성 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밤 부산 사상구 폐법동 한 다방에서 퇴근한 A씨(당시 22세)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A씨 통장에 든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해 6월 12일 복귀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 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미제로 문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 뒤 검찰 재수사와 시민 제보로 사건발생 15년

만인 2017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판결을 하고,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 양형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 증거가 되기 매우 부족하고,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등겨너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양씨가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 증거를 관련지어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로공, 자태치로 공인 인허가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